



특집 테마(1) 현대인의 질병과 한의

- 한의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에 대하여
- 분노사회와 화병, 그리고 한의학
- 현대인의 새로운 난치 질병인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법 연구
- 체외자극을 이용한 치료기술개발
- 현대인의 척추질환, 비수술요법으로서의 한의학의 역할

특집 테마(2) 한의약과 표준화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활용
- 약동학 기반 한약제제 약효표준화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연구
- 원의탕전실 평가인증제의 도입과 향후과제
- WHO와 한의약 국제보건 표준

정책 제언

- 한의 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방안 제언
-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학 발전 방안 제언
-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진출방향 제언


NIKOM 기관 소식





정책 제언

- 84 한의 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방안 제언
한창호
- 92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언
백유상
- 102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진출방향 제언
김현호



기관 소식

- 110 NIKOM 뉴스
- 116 이슈1
“대마 이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연구개발의 길 열렸다!”
- 118 이슈2
“한국한약진흥원, 한약제제 러시아 진출 길을 열다”
- 120 연구결과
- 122 특집1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삼소음’ 안전성 확인
- 124 특집2
한약제제생산센터&한약비임상시험센터 GMP-GLP 인증 받아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학 발전 방안 제언

① 들어가며

최근 몇 년 간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의 여러 분야 가운데 보건의료, 특히 전통의학은 남북 관계 회복과 통일한국의 준비 과정에서 우선적 교류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¹ 그 이유는 전통의학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하여 공통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남북 간의 격차도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남북 간의 전통의학 교류·협력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2000년대 초중반에 한의학과 고려의학 간의 협력을 위한 상호의향서 교환, 2차에 걸친 남북 민족의학 학술대회 개최 등의 교류가 있었다.² 그러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교류·협력 사업에 장기간의 공백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비록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가까운 미래에 교류·협력이 다시 활성화

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의 준비 과정에서 우려되는 현실적 문제들로는, 개별 단위 주체들의 생각과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모아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교류·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지 못하며, 따라서 통일한국의 보건의료와 전통의학이라는 큰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관련 정책 또는 실행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과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남북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계 전반의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김동수 외.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0:3.

2 김동수 외.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0:3.

2 본론

본 기고문에서는 한의계에서 기존에 제안된 대표적인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 관련 고려 사항, 이를 통한 한의학 발전 방안 등을 간략히 제시해 보았다.

1. 기존 제안된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방안 검토

1) 한의학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주영, 1998)³

1998년에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으로 작성된 연구 결과로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을 다음의 4가지로 설정하였다.⁴ 또한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 구체적인 ‘한의학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표 1)⁵

첫째,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철저한 한의학적 근거를 통한 증진 방향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향으로 교류·협력이 증진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경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교류·협력의 방법은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의학 분야의 교류·협력의 주체는 한의학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표 1. 한의학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주영, 1998)

카테고리	방안
분야별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방안	- 한약재 교류의 개선 방안 - 정책 기구의 강화 - 학술교류의 지속적인 개최 - 문헌정보 교류의 체계화 및 전문화 - 일관성 있는 협력사업의 추진
교류·협력 추진 단체 및 연구기관 설립	- 한민족 한의학 교류 추진위원회(가칭)의 설립 - 고려의학연구소(가칭)의 설립
한의학 교류·협력 기금 확보	- 기금확보의 구체화 - 기금확보의 방법

이 논문에서 제시한 교류·협력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민족 동질성 회복에 한의학 교류가 기여해야 하며, 한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서 실제적인 이익이 창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또한 교류·협력의 개선 방안들은 주로 남북한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수립, 기관 및 기금 설립 등의 기본 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 이들 방안 가운데 한약재 교류, 학술 교류, 문헌정보 교류 등 실천적 교류·협력 방안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북한의 보건정책과 고려의학 정책에 관한 연구 (남북한 의료(醫療)제도의 통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환영, 윤창열 외, 1998)⁶

3 김주영. 한의학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통일정책대학원. 1998:1-76.

4 김주영. 한의학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통일정책대학원. 1998:19-21.

5 김주영. 한의학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통일정책대학원. 1998:52-69.

6 최환영, 윤창열 외. 북한의 보건정책과 고려의학 정책에 관한 연구(남북한 의료(醫療)제도의 통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한의학연구원. 1998:1-372.

표 2. 남북한 의료(醫療)제도의 통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최환영, 윤창열 외, 1998) - 동의학(고려의학)과 한의학 교류를 위한 제언

분야	교류 방안
인적교류	- 한의사협회와 북한의 해당 민간조직 간의 상호 교류 - 상호 교환교수 파견 - 한의사들의 의료지원단(가칭) 참여
물적교류	- 한의사협회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적극 참여 - 동의학 서적과 한의학(韓醫學) 서적의 교류 - 진단 및 치료기기의 교류 - 북한의 동의약제의 수입
학술세미나 및 공동연구 시행	- 국가적 지원 상황과 방식 - 유관학과와 철학에 대한 상호 이해 - 임상진료의 범위와 노하우에 대한 교류 - 중의학, 일본의 전통의학, 인도의학, 티베트의학 등 고려의학과 한의학(韓醫學)을 제외한 동양의학에 대한 협력연구 - 동의학과 한의학(韓醫學) 용어의 통합을 위한 협력연구 - 동서의학의 공동연구 상황과 방안에 대한 교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북한 고려의학 연구원의 상호 인적·물적교류 시행	해당 사항 없음

이 보고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이며, 제3장 제3절에서 ‘남북한 의료 제도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동의학과 한의학 교류를 위한 원칙으로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⁷

첫째, 민간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의학과 한의학(韓醫學)의 교류는 통일의 제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 주로 이루어져야 하며 2단계(남북연합)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동의학이나 한의학(韓醫學)의 우월성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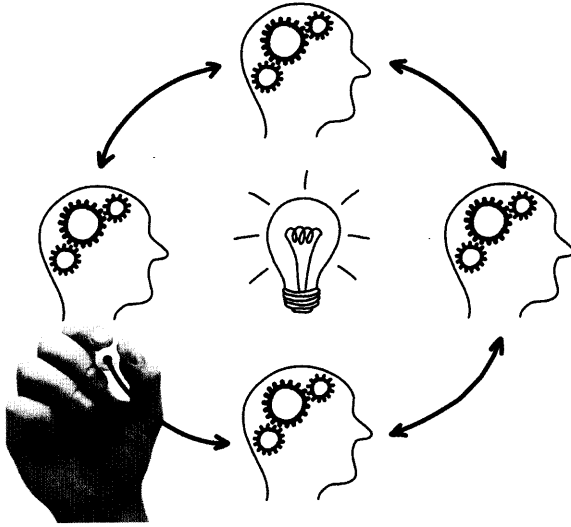
대한 선입견을 배제해야 한다.

넷째, 협력의 자세한 방식은 전체 보건의료 부문의 교류협력 방안에 준하며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

제시된 4가지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보다 정부차원의 교류협력 선행, 상호 호혜에 의거한 의료제도의 통합, 전통의학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 부문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방안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이상의 원칙에 따라 제시된 분야별 구체적인 교류 방안은 위와 같다.(표 2)⁸

7 최환영, 윤창열 외. 북한의 보건정책과 고려의학 정책에 관한 연구(남북한 의료(醫療)제도의 통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한의학연구원. 1998:355.

8 최환영, 윤창열 외. 북한의 보건정책과 고려의학 정책에 관한 연구(남북한 의료(醫療)제도의 통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한의학연구원. 1998:355-358.



대분류의 분야 구성에서 인적, 물적 교류 이외에 두 항목은 카테고리 수준에 맞지 않으므로 인적, 물적 교류 분야 하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야 별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살펴보면, 주로 한의사협회와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민간단체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가능한 인적, 물적 교류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의 대응방안(남북 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 (김성훈 외, 2014)⁹

이 보고서는 당시 과학기술한림원에서 출간한 남북통일을 대비한 각 분야별 대응방안 시리즈 중

하나로 작성되었다. 과학기술분야 대응방안 보고서 가운데 제3장이 보건의료의 대응방안이며, 그 중 '제4절 남북한 전통의학의 융합과 발전 모색'에 남북한 전통의학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남북한의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특성, 남북한 통일시대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 사회문화 통합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3단계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¹⁰

- 1단계 (소통과 교류)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용어 및 개념의 표준화 작업, 기초 정보 및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하여 향후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하여 학술 및 임상 분야에서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여 동질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 2단계 (통합과 실천)

인력 양성 분야에서 교육과정과 국가인증제도 등을 상호 균등, 균질하게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심도 있는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지원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이 실제 임상 분야와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며,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3단계 (융합과 발전)

9 김성훈, 박상민, 이혜원, 백유상, 이왕재.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의 대응방안(남북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 성남: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4:43-70.

10 김성훈, 박상민, 이혜원, 백유상, 이왕재.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의 대응방안(남북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 성남: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4:68-69.

표 3.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의 대응방안(남북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 (김성훈 외, 2014)
- 남북한 전통의학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주제	부분	방안
법률과 제도의 정비	의료 인력의 통합	- 한의사와 고려의사 간의 의료법 상 제반 조문과 규정의 통일 - 고려의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위 부여에 관한 규정의 제정 - 남북한 전통의학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의 통일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
	의료 시행과 지원 인력	- 침구 시술 관련 행위 및 기타 의료행위 관련 법규의 제·개정 - 한의약학과 고려약학의 통일 관련 법규의 제·개정 - 전통의학 의료 지원인력의 지위 및 관련 법규의 제·개정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구축	의료 행정과 의료기관	-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정부 내 행정담당 부서의 통폐합 - 층차별 전통의학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 구축 - 전통의학의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정책 연구와 관련 제도 구축 - 전통의학 관련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보호 관리에 대한 제도 구축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 전통의학의 사회보장(의료보험) 제도 구축과 법규의 제·개정 - 전통의학의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제도 개선 정책 수립과 시행
통일한국 사회에 대비한 미래 정책 개발	남북한 동질화	- 전통의학의 남북한 동질화 매개 역할에 대한 정책 연구 - 통일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에 대비한 전통의학의 기여 방안에 대한 정책
	미래 통일한국의 신동력	- 전통의학 기반의 신의료·의약 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 - 통일한국의 세계화 전략 속에서 전통의학의 역할에 대한 정책 연구

전통의학이 남북한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료 사회적 특성에 적합하게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통일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과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는 융합의 단계까지 발전시킨다. 또한 통일한국의 전통 의학을 주제로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전통 의학의 융합 분야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상의 단계별 접근의 밑그림 위에서 남북한 전통

의학 융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전통의학 관련된 이질적인 법률과 제도로 인한 문제 해결과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료체계 속에서 전통의학의 역할, 미래 통일한국 사회에 대비한 정책 개발 등을 목표로 한 세부 연구 과제들은 위와 같다.(표 3)¹¹

이상의 내용은 남북한 전통의학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리스트의 성격이므로 구체적인 인적·물적 교류 방안은 드러나 있지 않고, 법률, 제도, 시스템, 정책 등의 키워드 위주로 구성되어

11 김성훈, 박상민, 이혜원, 백유상, 이왕재. 남북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의 대응방안(남북통일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대응방안).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4:69-70.

있다. 사회보장과 공공성의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특징이며, 산업화 등 경제성을 고려한 정책 이슈들도 ‘미래 통일한국의 신동력’ 항목에 포함 되어 있다.

4)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김동수 외, 2020)¹²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남북한 전통의학 교류·협력 관련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제4장에서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3단계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¹³

- 1단계: 교류·협력 준비 단계

(남북관계) 제재 국면의 지속, (교류·협력) 교류 불가, (전통의학) 북 고려의학 이해 초기 단계

- 2단계: 교류·협력 초기 단계

(남북관계) 제재의 일정 해소, 평화 준비 시기, (교류·협력) 2000년대 교류·협력 수준, (전통의학)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상호 신뢰 구축 단계

- 3단계: 교류·협력 확산 단계

(남북관계) 제재의 완전 해소, 평화시기, 통일 모색, (교류·협력) 전면적 교류 및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 (전통의학) 남북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한 협력 모색

이상의 3단계 설정은 주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남북 및 기타 국가 간의 국제 관계 동향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며,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 공동의 이익 추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대한한 의사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서 제시하였던 교류·협력의 세부 아이템 10개를 선정하여, 3단계 시기별로 배치하였다. 단, 각 아이템은 교류와 협력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제도 통합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각 단계별 세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4)¹⁴

이상의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의 단계별 아이템들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한의계 내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리더십과 각 분야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변 국가들을 통한 대외적 국제 협력, 학문 분야의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를 기반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2, 3단계에서는 학술 교류사업을 제외하고 주로 한약물 관련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료기술 개발 등 산업화도 포함되어 있다.

2.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약 발전 방안 제언

기존 제안된 남북 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방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협력은 전문성을 갖춘 한의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한의계 리더십 구축이 제안되었다. 또한 한의계의 역량을 고려하여 정부

12 김동수 외.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0:1-152.

13 김동수 외.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0:144.

14 김동수 외.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20:144-148.

표 4.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방안(김동수 외, 2020) -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단계별 방안

주제	부분	방안
1단계 교류·협력 준비 단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한의계 리더쉽 구축	- 사업 추진의 효율과 모색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 - 정기적인 고려의학 최신 정보 취득을 위한 고려의학 동향 브리프 발간
	분야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 전략 수립	- 연구, 임상, 제약, 교육 등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수립
	삼각협력을 통한 지식공유 사업	-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북한의 지리적·정치적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남측의 비교 우위 기술에 대한 교육과 교육 기반 마련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기반 구축 사업	- 남북의 전통의학 관련 용어 수집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북 전통의학 용어의 특징 분석 및 남 전통의학 용어와의 비교
2단계 교류·협력 초기 단계	남북 전통의학 학술 교류사업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위한 '남북 학술교류 협의체' 구성 - '민족의학 학술토론회' 정례화 및 남북 분야별 학술교류 활성화 - 남북 각자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상호 교육 사업 - 남북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한반도 한약(약초)자원 공동개발 사업	- (추진단 구성) 한국한의학연구원, 농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산, 학, 연, 관의 회의 체계를 구성하여 사업범위 및 추진방향 설정 - (공중조사)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약용식물 분포와 표본 수입을 위한 식생 분포 조사 연구 - (DMZ조사) 한반도 전역 조사 이전에 접경지역이면서 특수 생태환경을 보유한 DMZ에 대한 우선 공동 조사
	한약재 가공공장 설립	- 1단계 : 현재에서 물량확보가 가능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수입 - 2단계 : 한약재 제조업체의 북한 내 가공공장(GMP) 건설
	한의학 관련 인도적 지원 지속	- 의료장비, 왕진가방, 서적, EMR 시스템 등 고려의학과 관련한 물품 지원
3단계 교류·협력 확산 단계	한약제제 공장 건립 사업	- 남측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가칭) 이북 제약 공장 건립 관련 산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북한과 협의를 통해 현지 수요 확인 및 공지 부지 등 시설투자 검토 진행 - 생산 초기에는 북한 수요에 맞게 생산하고, 점차 생산량을 늘려 남측 또는 해외 수출 추진
	남북 공동 전통약 의료기술 개발 사업	- 남측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남북 공동 연구 개발 사업단' 구성 - 북한 우수 처방 및 우수의료기술 발굴 - 북한과의 특허(기술료) 문제 해결 - (의약품)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후 의약품 허가와 출시 - (의료기술) 남측의 임상연구 전문인력 기술을 통해 북의 대학병원과 고려의학 연구원 병원을 중심으로 임상연구 수행. 이후 성과가 좋은 경우 남측에 의료 기술 교육 및 신의료기술 등록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이 많이 고려되었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와 호혜 평등을 추구해야 함이 강조되었으며, 학문 분야에서는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등의 기반 연구에 대한 제시가 많았다. 기타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의 남북 전통의학 통합에 대한 구상,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단계별 접근 방식, 사회보장과 공공성 측면의 접근, 한국 보건의료 전체의 교류·협력에 대한 고려, 주변국들과의 국제 협력 제시 등이 특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단, 미흡한 부분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이 수익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점, 특정 단체나 기관의 단기적 사업들이 제시된 점, 최근 국내의 동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내용이 포함된 점, 법률, 제도, 시스템, 정책 등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약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우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 관련 고려 사항

(1) 한의계 리더십 구축

북측의 경우는 교류·협력의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으므로 상당 기간 남측도 그에 상응하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 한의사협회, 국책연구기관 등이 단독으로 창구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특히 사업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협의체에 참여하여 종합적인 정책 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우며, 한편 견제도 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 학술단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보건의료 각 분야별 학술단체의 연구와 참여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예와 같이 한국 보건의료계 전체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술단체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2) 남북 간 상호 이해와 호혜 평등의 관계

그동안 남북 간 상호 호혜의 관계 설정이 강조되어 왔는데, 그 수준이 기계적인 균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단순한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 한국을 내다보면서 공공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현재 고려의학이 가진 유형·무형의 자원들을 보충해 나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3) 공식적인 교류·협력의 유지

대부분의 실제 교류·협력을 민간이 진행하기는 하나 공신력을 갖지 못할 경우 상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의 교류·협력 주체들은 반드시

표 5.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학 발전 방안(제안)

카테고리	방안
기존 제안 내용 요약 및 보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교류 사업: 학술대회 개최, 용어 표준화, 공동 연구 과제 수행 - 한약 관련 사업: 한약재수출입, 한약물 자원 공동 재배, 한약 제약 사업 - 경제 협력 사업: 임상연구 수행, 신의료기술 공동 개발, 통일한국의 전통의학 세계화 - 인도적 지원 사업: 의료지원단 파견, 의료장비 지원, 기타 남북 동질화 사업 - 정책 개발 및 행정 지원: 통합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연구 및 정비, 관련 행정 체계 구축,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강화 - 국제 협력: 동아시아 전통의학 관련 국가와의 연계 강화
추가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학 유·무형 인프라 구축: 고려의학 지식정보 표준화, 공동 DB 구축, 공동 EMR 개발, 임상 및 연구 기반 시설 구축 - 교육 사업: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생 인적 교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사업: 통일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련 법률, 제도, 행정 지원 및 시설 인프라, 인력 등 지원 -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협력 사업: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강화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4) 시기별 단계와 장단기 플랜의 수립

남북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차이가 극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단계별 접근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성, 난이도, 최종 목표의 차이에 따라 세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화가 심한 국제 관계에 기인한 정치적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통일한국의 의료 통합에 대한 정책 개발은 중장기 과제로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공유와 컨센서스

정부와 민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의 밑그림을 만들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남북 전통의학 협력 포럼’¹⁵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각 단위 주체 간의 협력 작업을 통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교류협력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기회의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각 교류·협력 주체들은 단기적 사업 성과와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6)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전반적 고려

한의학은 한국 보건의료의 체계 안에 놓여 있으므로, 보건의료 전체의 남북 교류·협력과 궤를 같이 해야 전통의학 교류·협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이미 모든 의학 분야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5 한국한의학연구원 주관으로 2019년 4월 9일, 6월 19일, 11월 27일에 연속 개최되었다.

남북의 모든 교류·협력은 통일한국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남과 북의 보건의료 체계를 재구축해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체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전통의학의 위치와 역할,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류·협력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단위들이 교류·협력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2) 남북 전통의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의약 발전 방안

이상의 6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중장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약 관련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승인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약물 수출입, 재배, 제약 등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민간 개별 사업들의 난립을 막고 사업 주체 스스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승인과 행·재정 지원을 받아 고려의학의 유·무형 인프라를 구축(사회보장 및 공공의료 인프라 포함)하는 사업도 공적 지원 하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의 보건의료 기반 구축의 하나로서 단순한 공동 이익 추구라는 기계적 평등 논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 사업들을 통하여 현재 남북 보건의료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의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 전통의학 공동 플랫폼의 EMR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 한의계의 지식정보 표준화, 관련 DB 구축 등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제안되었던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정책 및 방안들 이외에 새로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예시해 보면 위와 같다.(표 5)

③ 나가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능한 수용하려는 자세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점은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원하는 모든 단위 주체들 사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여 서로 협력하지 않고 단기적 성과만을 추구하였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안도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달리 말하면 내용의 수준보다 공유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컨센서스 위에 수립된 정책과 방안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한의계에서 향후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의 정책과 방안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가 한의계 또는 한국 보건의료계의 관련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연구 및 정책기관, 대학 그리고, 한의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